

사립대학 재정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이 만 형

부산대 기계공학부 교수, 기획연구실장



1

한 나라의 경쟁력은 교육이 좌우한다. 양질의 교육을 통하여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많은 국가들이 초·중등교육을 의무 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도 정책적으로 국립 또는 공립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본교육 이외에 국민, 즉 교육수요자들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모든 교육기관을 국가가 전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며,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가 요구되는 특수목적의 고등교육기관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국가의 여건이나 방침에 따라 국·공립 이외에 육영사업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설립하는 사립교육기관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특히 국민들의 엄청난 교육열에 편승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립교육기관이 존재한다. 대학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국·공립대학보다 사립대학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국가의 교육재정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립대학이 고급인력 양성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특히 사립대학은 국립대학에서 다루기 어려운 특수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 따라서 수익자부담원칙에 근거하여 특수한 목적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다양한 교육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사립대학의 설립자들은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는 일반 기업의 설립자와는 달리 국가나 사회의 인재를 길러낸다는 육영사업에 뛰어든 큰 뜻을 가진 분들이다. 그 분들은 기업을 설립했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고, 자신의 자산을 국가나 사회를 위한 교육사업으로 돌린 훌륭한 덕망을 가진 분들로 평가되어 마땅하다.

반면에 국립대학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고급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서, 전공 분야가 어느 특정 영역에 한정되기보다는 다방면의 전공을 포괄적으로 개설하여 국가의 일반적 인재 육성에 부응해야 한다. 그리고 운영재원을 국고로 충당함으로써 고등교육을 받을 능력이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실제로 나라에 따라서는 거의 모든 대학이 국립으로 운영되며, 학생들은 학비 부담 없이 교육을 받는다. 국립과 사립이 공존하는 나라의 경우에도 국립대학은 학비부담이 거의 없거나 사립대학에 비해서 그 부담이 현저히 낮다.

국립대학은 원칙적으로 그 재원을 국고에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립대학들은 국가재정상의 문제로 인하여 운영예산의 상당 부분을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컨대 부산대학교의 경우에도 학생 등록금이 전체 예산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사립대학은 원칙적으로 그 재원을 수익 사업을 통한 재단전입금과 수익자부담원칙

에 근거한 학생등록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사립대학은 학생들의 등록금이 국립대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립대학들은 모자라는 재원을 자구 노력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국고의 지원으로 충당하려고 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암묵적으로 이에 호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은 설립 목적과 취지에서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된다.

2

모든 문제의 해결은 근본원칙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현재 국립대학의 경우 비록 학생의 등록금으로 그 운영재원의 일부를 충당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국립대학이 국민의 세수에 의한 국고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명념해야 한다. 수업료와 기성회비라는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는 국립대학의 등록금을 점진적으로라도 국고로 대치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이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고급인력을 양성한다는 근본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는 턱없이 모자라는 교육재원으로 사립대학까지 지원하겠다고 나섬으로써 교육재정 지원 자체를 속빈 강정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이미 설립되어 있는 국립대학이나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립대학은 재단전입금과 학생등록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다. 학교재단은 수익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여 재단전입금을 늘려

나가야 한다. 그리고 철저한 교육원가 계산과 합리적 학교운영을 통하여 시설의 증복투자, 교직원들의 고임금 등의 문제점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며, 학생등록금의 사용처를 명백하게 밝히고 ‘등록금 예고제’와 같은 방안을 채택함으로써 학생들과의 등록금 마찰을 스스로 해소시켜 나가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사립대학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길이며 자신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들이 계속 규모를 확대하면서 모자라는 재원은 국가재정에 매달리겠다는 것은 스스로 경쟁력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오늘날 정부는 대학의 경쟁력 운운하면서 그 재원 조달에도 자구 노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립대학조차도 그 재원 조달의 경쟁현장에 내몰리는 현실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국립대학의 경우, 재원 조달의 자구 노력은 근본적으로 국립대학의 설립 취지와 모순된다. 국립대학은 설립 주체도 국가이고 재원 조달의 주체도 국가여야 한다. 오히려 사립이야말로 재원 조달에 있어서 대학이나 재단의 자구 노력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말은 국립대학의 이기심의 발로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국립대학이라는 말의 개념과 그 존립 의의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주장이다.

모든 국가에는 국민 개개인의 경제력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경제적 문제로 인해 고등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인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도 국립대학은 존재 의의가 있다. 물론 그 비용을 국가가 전적으로 또는 상당 부분 부담한다는 전제가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대학은 국립이든 사립이든 마찬가지로 교육재정

의 상당 부분을 등록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경제력이 부족한 일반 서민 중에서 우수한 인재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의 기회가 박탈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기회가 경제력에 따라 불평등하게 적용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교육기회의 불평등에 따라 사회의 다른 제반 문제의 불평등도 초래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자명한 일이다.

3

우리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대학의 판을 원칙에 의해서 새로 짜야 한다. 우선 고등교육을 위한 재원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폭 확충하여야 하며, 현재의 한정된 재원도 국립대학에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그래서 경제적 능력에 관계 없이 모든 국민들이 자신의 수학능력에 따라 국립대학에서 고급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사립대학은 애초의 설립 취지나 그 설립자의 사회봉사 정신에 비추어 일차적으로 재단이 재원 조달의 책임을 져야 하며, 모자라는 부분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교육수요자의 등록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또한 그 등록금의 내역은 사전에 공시하여 대학지원자가 자신의 수학능력 목표, 경제적 능력 및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특성을 감안하여 자유로이 선택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 비록 사립대학의 등록금이 지금보다 인상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러한 상황을 수용하는 학생들이 사전에 인지하고 지원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정책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사립

대학의 등록금은 주립대학이나 국립대학에 비해서 3~4배 많다.

만일 사립대학이 자신의 책임을 방기한 채 그 재원을 재단에서 조달하려 하지도 않고, 학생의 등록금으로도 모자라 국가에 요구하여 충당하려 한다면, 국가의 교육재정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가에 부담을 주게 되어 사립대학이 이 사회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상실하는 것이다. 사립대학으로서 그 운영 재원을 국고에 의존한다면, 이미 그것은 사립대학이 아니라 국립대학이다. 더구나 사립대학 중에는 국민 일반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특정집단에만 해당되는 건학이념을 내세우는 대학도 있기 때문에 국민일반이 낸 세금을 특수한 건학이념을 내세운 대학에다 쓸 수는 없는 일이다.

또한 국민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건학이념을 가지고 있는 국립대학과는 달리 사립대학은 다양한 건학이념을 내세워 학교를 운영함으로써 교육수요자가 어느 정도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립대학에서 얻기 힘든 다양한 교육의 내용과 질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고, 또한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래서 사립대학은 백화점식 학과 나열을 지양하고 학문 분야를 더욱 특성화시켜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 지금처럼 국립대학과 학과 설치 면에서 차별성도 없고, 재단이 교육재원 조달의 책임을 국가와 국민 일반에 전가하려 한다면,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리와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은 자명한 이치다. 권리가 있으면 그 권리는 책임과 의무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4

국민이 내는 세금은 국민 일반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교육에 있어서도 국민 일반에 관한 교육이념으로 설립된 국립교육기관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지, 특수한 설립목적에 가진 사립대학을 위해 쓰일 것은 아니다. 물론 사립대학의 구성원들도 국민들이다. 그러나 사립대학은 애초에 국민에게 그 운영 재원을 기대하고 설립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공기업과 사기업의 관계와 같다. 사기업의 구성원도 국민이지만, 그 자본을 국가에 요구하지는 않는다. 만일 사기업의 자본을 국가에 요구한다면 사기업임을 포기하고 국영화되어야 한다. 요컨대 사립대학이 진정으로 자신의 건학이념에 충실하면서 이 사회에 기여하려면 사립대학 본연의 자세에 충실해야 한다. ❁

이만형/부산대 전기공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오리건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육사 전임강사와 오리건 주립대 포스트닥을 지내고 현재 부산대 기계공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로 『최신 자동제어』,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응용』 등이 있고, "Stochastic, Dynamic System Suboptimal Control with Uncertain Parameters" 외 2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